

‘축제’로 타올라 ‘평화’로 끝났다

광주 종교계 가세 주말 비폭력 집회... 촛불 수배자 조계사 농성

‘6·10 100만 촛불집회’ 이후 전국적으로 최대 인파가 몰린 7·5 국민승리의 날 촛불집회는 평화로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5일 밤 서울에서만 50만명(경찰추산 5만명)이 운집하는 등 전국적으로 100만명이 상이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광주에서도 1만여명(경찰추산 5천명)이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정치·종교·시민단체 대표들의 ‘인간방패’=5일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지난달 30일 시국미사를 겸한 촛불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개신교와 불교, 원불교가 잇따라 집회에 동참하면서 이어진 6차례 연속 평화집회였다.

국민대책회의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4개 종단을 대표하는 종교인, YMCA·한국청년연합회(KYC) 등 시민단체 대표들이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을 막는 ‘인간방패’의 역할을 하도록 주문했다. 시청광장·세종로 등으로 이어진 거리시위에서 이들은 시위대 전후좌우에 배치돼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

◇비폭력 속에 진행된 ‘촛불축제’=비폭력 기조 덕분에 이날 집회는 이색적인 퍼포먼스와 문화행사가 반세 도록 이어지는 등 축제 형식으로 진행됐다.

전국농민회총연합 회원 80여명은 1t 트럭 3대 분량의 수박과 토마토 등을 집회 참가자들에게 나눠주었다.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 데리고 나온

주부, 초등학생 아이의 손을 잡고 나온 부부 등 가족 단위 참가자들도 눈에 띄게 늘었다.

◇촛불집회 주최자 조계사로 피신=촛불집회를 주최한 협의(집시법 위반 등)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주회측 관계자 6명은 조계사로 피신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부위원장 백은종씨를 비롯해 박원석, 한용진 공동상황실장과 한국진보연대 김동주 정책국장, 김광일 ‘다함께’

운영위원, ‘미진소닷넷’ 백성균 대표 등 6명이다.

◇광주에서도 평화 촛불=5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촛불집회는 시민과 종교계·노동계·농민단체 회원 등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개최됐다.

이날 촛불집회는 4개 종단 종교인들이 시위대 맨 앞에 앉아 평화집회를 이끌었으며, 광주·전남지역 대학교수단 등의 자유발언과 고교 밴드팀 공연, 노래 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 순

으로 진행됐다.

집회 참가자 3천여명은 촛불집회가 끝난 뒤 종교계 대표들을 선두로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검 청사까지 행진을 했으며, 촛불집회 탄압에 항의하는 의미로 촛불을 ‘풀리사랑’ 앞에 내려놓고 자신 해산했다. 광주·전남지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는 주말인 오는 12일에도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인원기자 ahj@kwangju.co.kr 연합뉴스



7·5 국민승리의 날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 5일 밤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1만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고시 무효’와 ‘국민주권 수호’를 외치고 있다. 천주교·불교·기독교·원불교 등 종교인들이 맨앞에 앉아 평화집회를 이끌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촛불집회는 피플 파워”

앤네스티 조사관, 대책회의 방문 조사

촛불집회와 관련한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러 방한한 국제 앤네스티 노마 강 무이코(여·41) 조사관이 지난 5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방문, 핵심 관계자들을 인터뷰했다.

6일 앤네스티 한국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개별적인 피해 사례보다는 지금까지 촛불집회의 경과를 전반적으로 살피기 위한 방문으로 구체적인 사실은 앞으로 현장과 피해자 조사를 통해 수집된다.

무이코 조사관은 전날 입국한 뒤 서울광장에서 불교계 주최로 시국법회를 겸해 열린 촛불집회를 지켜보고 종교계 인사들과 면담했으며 앞서 병원을 방문해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과도

인터뷰했다. 지난 4일 방한한 무이코 조사관은 입국 첫날 경험한 촛불집회를 본 뒤 “위대한 민중의 힘(Great People Power)이다. 굉장히 평화롭고 잘 조직돼 있다. 동아시아 담당관으로 어디에서도 이런 장면은 본 적이 없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2주일 정도 한국에 머물며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에 관련된 피해자와 목격자, 정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경찰의 진압도구가 집회 참여자나 전의경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17일께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기말고사 과학 답안지 증발 광주 모 중학교 재시험 소동

광주시내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기말고사 답안지가 통째로 사라져 재시험을 치렀다. 광주 B중학교는 토요일이던 지난 5일 2교시 때 3학년 전체 학생 190여명을 대상으로 기말고사 과학 과목 재시험을 치렀다.

이에 앞서 기말고사 기간이던 지난 3일 1교시 때 치러진 과학 과목의 OMR 답안지 한 학급 분량이 한꺼번에 사라졌기 때문이다. 학교 관계자는 “감독 교사가 답안지를 수거해 서랍에 넣은 뒤 바로 다음 교시 감독을 갔는데 그 사이에 사라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긴급히 교내 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재

시험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시험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시험 관련 정보 유출로 현저하게 성적 차이가 난 경우” 등은 관련 교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고, 사례도 있지만 답안지가 모두 사라진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해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누군가에 의해 도난을 당한 것 같은 심정은 있지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없는 일이어서 난감하다”며 “감독 교사로부터 경위서를 받았고, 상부 기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므로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다중의 건축·산업·지체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자막 및 상량판형

가출 청소년들 상습 차량털이

○광주북부경찰은 6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15대에 대해

촛불 집회 파손 경찰차 보험 처리될까

원칙적으로 보상 가능 경찰, 손배소송 낼 수도

촛불 집회 과정에서 파손된 경찰 버스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5일 손해보험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방경찰청별로 보험사를 정해 경찰 버스를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경찰은 자기 차량손해를 포함한 종합보험에 가입해 일반적인 집회·시위 과정에서 차량이 망가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그런데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는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하지 않아

도 되는 면책 사유로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촛불 집회는 이런 면책 사유에 해당될까. 이 문제는 일부 보험업계 종사자들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질문이다.

대법원은 1991년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연고팀이 역전패하자 상대팀 선수단 버스를 가로막고 돌파빈 병을 던진 사건에 대해 “소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한 바 있다.

하지만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5·6공화국 당시 반정부 시위로 인한 보상 문제에 대해 법원이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촛불 시위 과정에서 생긴 차량 파손도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경찰은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처리 대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서울광장 설치 천막

종교단체 자진 철거

서울광장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간 종교단체들이 이 천막들을 자진 철거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밤부터 이날 낮 사이 서울광장에 천막을 설치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등 종교단체들이 잇달아 천막을 자진철거했다. 시는 그러나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은 진보신당과 사회당, 아고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천막 등 나머지 7개에 대해선 이날 오후 4시에 강제철거 했다. /연합뉴스

5·18묘지 관리소장 3차 제공모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소장직 인선이 또 다시 연기됐다.

6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1월의 1차 공개모집에 이어 5월 23일까지 실시한 2차 모집에서도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해 관리소장(4급) 공석 상태가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 응모를 받는다고 3차 제공고를 냈다.

1차 공모 당시 8명이 지원했지만 당시 대통령직인수위가 ‘4급 이상 직원의 신규 채용과 인사이동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선임절차를 중단했다가 2차 공모를 냈고 2차 공

모에서 마땅한 적임자를 찾지 못해 10명의 응모자 모두 탈락했다.

5·18 민주묘지의 특수성을 이해하더라도 5·18 민주묘지에 대한 전문성이나 변화관리능력, 능통한 외국어 실력 등을 갖춘 인물이 적임이라고 여겼고 있지만 응모자들 중에 합당한 인물이 없었다는 것이다. 응모자들은 서류심사를 거쳐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발위원회에서 면접을 거쳐 소장 적격 여부를 판정받는다.

한편 5·18 묘지 관리소장은 지난해 10월 29일 박경순 전 소장이 지병으로 타계함에 따라 지금까지 공석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종형기자 golee@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가출한 뒤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했으며, 범행 현장을 다시 찾아와 배회하다가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는 것.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조이 여행사... 379,000... 489,000... 519,000... 699,000... 559,000... 329,000

국립 러시아... 1,170,000... 669,000... 739,000... 519,000... 719,000... 739,000... 439,000

항공... 829,000... 829,000... 600,000... 270,000... 599,000... 699,000... 699,000... 899,000

국내 관광... 163,000... 140,000... 273,000... 85,000... 99,000... 249,000... 233-5900